

統一情勢分析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향후 공조 방향

2003. 5

이헌경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영호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 일 연 구 원

<요 약>

1.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 북핵문제 및 여타 문제 등 제반 현안으로 한반도정세가 불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은 양국간 정치·외교·군사·경제 분야의 공동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음.
- 한·미 정상간 의견교환을 통해 동맹, 북핵문제, 경제관계 등 한반도 제반 현안에 대해 상호이해를 높였으며,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함.
- 전통적 안보 개념의 동맹 범위를 넘어 비군사적 범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관계로 확대함.
- 한반도 방어에서 기술력과 한국군의 역할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의 질적인 전환을 예고함.
- 주한 미군기지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고려하고 한·미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함.

- 한국의 이라크전 참여를 계기로 한·미간 안보협력이 고양되고 있으며, 향후 대테러전, 북한의 마약밀매·위조지폐 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양국간 새로운 역할이 모색됨.
- 평화번영정책과 남북화해과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함.
- 평화적·외교적 수단을 지향하되 북한이 핵보유를 고집할 경우, 모든 대응 방안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 한·미·일 공조, 한반도 주변국의 역할,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함.
- 한·미간 인도주의적 목적의 대북지원의 지속과 배분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함.
- 북핵문제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남북간 정치·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으로 대두된 한국의 경제불안정성을 상당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함.

2. 한·미 공조 방향

- 한·미 정상간에 이루어진 개인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불용’을 실현시키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정립함.
-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조바심을 갖지 않는 의연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미간 정책협력 채널을 상시적으로 가동함.
- 한·미 양국은 미국의 ‘先 북핵문제 해결’ 입장과 한국의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 병행 추진’ 입장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한·미동맹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당면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재건과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식 하에 현실주의적이며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임.
-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가동하여 공동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시행하도록 하며, 포괄적·역동적인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정부간 차원에서 공동 연구팀을 구성·가동함.

-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공조는 세계질서 주도국으로서의 미국의 안보전략과 지역국가로서의 한국의 안보전략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의 국익에 기여하는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과 관련한 안보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미 양국은 정책목표, 협상과정,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사후 통보·설명해줌으로써 상호간의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한·미동맹을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배경으로 활용하고,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감.
-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양자간의 실리적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틀로써 활용하는, 비대칭 동맹 속의 국가간 이익 균형을 추진하는 현실주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한국의 정책 방향

- 북핵문제 우선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위에서 한·미간 역할 분담을 통해 해결을 추진함.
- 주한미군의 재배치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수준 또는 정상화, 북·미관계의 진전 수준에 따라서 한·미동맹의 기본 축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 수준, 미국의 동북아전략, 동북아 국제질서 등을 감안하여 논의함.
-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대로 한국과 일본이 다자회담의 초기부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조화될 수 있는 의제의 창출이 필요할 것임.
- 한국이 다자회담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남북 당국간 대화에서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등 안보 사안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임.
- 최고 정책결정자 수준에서부터 각급 정책실무선에 이르기까지 정책협력과 조정의 제도화를 위해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운영함.
-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식견과 협상 능력을 겸비한 관료, 전문가들을 충원하여 대미 협상 능력을 제고함.

- 목 차 -

I. 문제 제기	1
II.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3
1. 정상회담 개최 배경	3
2. 정상회담 주요 내용	4
3. 분석 및 평가	8
III. 한·미 공조 방향	13
1. 북핵문제	13
2. 안보문제	14
IV. 한국의 정책 방향	16
1. 북핵문제	16
2. 주한미군문제	16
3. 다자회담문제	17
4. 한·미정책협력문제	18

I. 문제 제기

- 21세기에 접어들어 안보개념이 전통적 안보 위협에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인식되기 시작하였음.

- 미국의 대이라크전은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 위협 제거라는 예방적 자위권 행사와 석유수송로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라크전 이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목표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음.
 - 대이라크전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간의 갈등으로 이어진 반면,
 - 북핵문제는 세계의 군사강국이자 동북아 지역세력인 미·일·중·러의 이해관계로 대립되고 있음.

- 북한의 핵동결 해제로 촉발된 북핵사태는 그 해법을 둘러싸고 미·북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은 ‘체제보장 - 핵포기’를 제의한 반면, 미국은 ‘선 핵포기 - 후 조치’ 등을 주장하고 있음.

- 미국은 북핵 해법에 있어서 관련 당사국들이 포함된 다자틀 속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음.
 - 미국, 북한, 중국이 참여한 3자 회담에 이어 한국, 일본이 참여

하는 다자 회담이 모색되고 있음.

○3자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보유를 시인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왔음.

-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하는 것임.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변화와 국제사회 참여 등을 이끌고자 하나, 북한의 핵문제로 이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한·미간에는 북핵문제 대처 방향, 대북 인식·접근·속도 등에 대한 이견차가 존재해 왔으며, 이로 인해 동맹관계가 위축되어 왔음.

○더군다나 일각의 한국내 반미, 미국내 반한 감정과 함께 군사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거론되어 왔음.

○북핵문제 및 여타 문제 등 제반 현안으로 한반도정세가 불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은 양국간 정치·외교·군사·경제 분야의 공동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음.

II.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1. 정상회담 개최 배경

- 한·미는 상호방위조약 5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관계 재확인 및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재논의가 필요시 되었음.
-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미간은 21세기를 향한 협력의 틀을 다질 필요가 대두되었고, 한국의 평화번영정책을 미국에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음.
- 여중생 사망사건과 촛불시위이후 한·미 양국은 일각의 반미, 반한 감정 등으로 불편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북핵문제로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정상간 회담이 필요시 되었음.
- 북핵문제 대처방안에 있어 한·미간 이견차를 드러난 상황에서 양국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음.
- 한·미간 제반 현안과 관련, 한국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

적 해결, 한·미동맹 강화, 한강 이북 주한미군 재배치의 유보, 한·미 경제관계의 발전 등을 위해 정상회담에 나서게 되었음.

2. 정상회담 주요 내용

○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George W. Bush) 미 대통령은 2003.5.14 정상회담을 통해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공동 노력키로 다짐함.

가. 한·미 동맹

○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함.

○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 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합의함.

- 미군을 주요 축으로 하는 통합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함.

-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한반도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데 대해 유의함.
-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 안보상의 도전에 맞서 한·미 양국간 협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환영함.
 - 항구적 자유 작전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대한 한국군의 기여에 주목하면서 대테러 전쟁의 진전 및 협력 상황을 검토함.

나. 북한

-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함.
 - 북한의 재처리, 핵무기의 보유와 이들 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사태악화 조치는 북한을 더욱 고립되고 절박한 상황으로 이끌 뿐이라 강조함.
-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하면서, 문제

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함.

○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함.

○ 베이징 3자회담(4.23~25)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환영함.

○ 다자 외교를 통한 성공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에 있어 한국과 일본이 필수적이며, 러시아와 여타 국가들도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함.

○ 정치적 상황 전개와 연계 없이 인도적 대북지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재확인하고 동 지원이 주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유의함.
-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의 최대 공여국임에 주목하면서,
-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과감한 접근방안 및 국제사회가 북한주민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강조함.

○ 한국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남북화해 과정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함.

- 노무현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미 정상은 이 문제와 관련, 양국 정부간 긴밀한 공조유지와 한·미·일 3국간 협의 약속을 재확인함.
- 부시 대통령은 대화채널이 북한에게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데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함.

다. 경제관계

- 한·미간, 지역내 그리고 전세계적인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음.
- 한국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 데 이해를 같이 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의 지속적 증가 전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표명함.
-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무역, 금융, 투자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노 대통령의 목표를 환영하고 지지함.
- 무역개방, 투자, 투명성의 제고가 동북아 경제중심 개념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에 동의하고, 이러한 노력에 있어 민간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함.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협의를 통해 한·미간 통상 현안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 기존의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함.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라. 완전한 동반자관계 지향

○상호신뢰와 존경에 힘입어 향후 북한 핵문제 및 여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함.

3. 분석 및 평가

가. 포괄적·역동적 동맹관계 지향

○한·미 정상간 의견교환을 통해 동맹, 북핵문제, 경제관계 등 한반도 제반 현안에 대해 상호이해를 높였으며,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함.

-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한·미공조 재다짐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였음.
- 전통적 안보 개념의 동맹 범위를 넘어 비군사적 범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관계로 확대함.
 - 군사분야 외 정치·경제·문화 등의 분야로 확대·심화시켜 한·미간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함.

나. 현대화에 근거한 한·미동맹

- 한반도 방어에서 기술력과 한국군의 역할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의 질적인 전환을 예고함.
 -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화 그리고 군사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함.
- 주한 미군기지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고려하고 한·미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함.
 - 용산 미군기지는 조기 이전하기로 하나,
 - 한강 이북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은 한반도의 여러 정치·경제상황과 주변 정세를 주시하면서 신중히 추진함.
- 한국의 이라크전 참여를 계기로 한·미간 안보협력이 고양되고 있

으며, 향후 대테러전, 북한의 마약밀매·위조지폐 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양국간 새로운 역할이 모색됨.

-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부품 밀매뿐만 아니라 마약밀매 및 위조지폐 제조 유통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한·미 공조를 강화해 이를 차단하고자 함.

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접근과 위기대처 방안

○ 한국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남북화해과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함.

-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시 대통령을 대상으로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함.
-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대화 채널의 중요성을 미국에 인식시키고 한국의 역할을 확인함.

○ 평화적·외교적 수단을 지향하되 북한이 핵보유를 고집할 경우, 모든 대응 방안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함.

- 평화적 접근과 북핵불용 원칙을 재확인함.
-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추가적 조치와 단호한 대처를 시사함.
- 조치·대처 방안에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함.

○ 한·미,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려는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음.

-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을 것과 북한을 달래고 북한의 페이스대로 북·미협상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 자세를 알 수 있음.
- 미·북간 협상과정에 있어 한·미,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함.

○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반도 주변국의 역할과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함.

- 특히 중국의 향후 역할과 한국, 일본,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중시하면서 다자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미국의 정책방향을 재인지할 수 있음.

○ 한·미간 인도주의적 목적의 대북지원의 지속과 배분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함.

- 미국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상황과 연계 없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서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문제와 연계 없이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자세를 보임.
- 그러나 김정일 정권과 북한주민을 구분해 지원에 나서려는 의지를 재차 보임.

○북핵문제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남북간 정치·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북핵문제와 남북교류협력의 연계 정책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나,
- 동 문제가 악화될 경우,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으며,
-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동시에 악화되어 한반도에 정치군사적 긴장국면이 조성될 수 있음.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으로 대두된 한국의 경제불안정성을 상당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함.

- 한국경제에 대한 희망적 전망과 경제구조개혁에 대한 미국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대외신인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Ⅲ. 한·미 공조 방향

1. 북핵문제

- 한·미 정상간에 이루어진 개인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¹⁾ ‘북한의 핵보유 불용’을 실현시키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정립함.
 -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강온정책을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전략을 추진함.

-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조바심을 갖지 않는 의연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미간 정책협력 채널을 상시적으로 가동함.
 - 정상간 Hot-line의 수시 가동함.
 - 기존의 한·미·일 3자조정감독그룹(TCOG) 채널 이외에 한·미간 상시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가동함.

-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나, 미국의 ‘先 북핵문제 해결’ 입장과 한국의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 병행 추진’ 입장간에 갈등이 발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180명(응답자 1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90%이며, 이들은 주로 ‘한미정상 간 신뢰구축’과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 접근’을 그 이유로 들었다. 『연합뉴스』, 2003.5.21.

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가동하여 공동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시행하도록 함.

2. 안보문제

- 한·미동맹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당면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재건과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식 하에 현실주의적
이며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함.
- 따라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포괄적·역동적인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정부간 차원에서 공동 연구팀을 구성·가동
함.
 - 이러한 협력 채널의 구축은 한·미간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좁힐 수 있으며,
 - 동시에 한·미의 대북정책에서의 공유부분을 확대해나갈 수 있
을 것임.
 - 또한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을 공동의 정책 수단
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임.

-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공조는 세계질서 주도국으로서의 미국의 안보전략과 지역국가로서의 한국의 안보전략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의 국익에 기여하는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미 양국간에는 극비보안사항도 있을 것이지만, 북한과 관련한 안보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양측이 정책목표, 협상과정,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사후 통보·설명해줌으로써 상호간의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한·미 양국간에 신뢰 있는 정책공조를 지속하는 바탕이 됨.
- 한·미동맹을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배경으로 활용하고,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감.
 - ‘역할 분담, 병행 추진’ 전략
-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양자간의 실리적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틀로써 활용하는, 비대칭 동맹 속의 국가간 이익 균형을 추진하는 현실주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IV. 한국의 정책 방향

1. 북핵문제

- 북핵문제 우선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위에서 한·미간 역할 분담을 통해 해결을 추진함.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先 지원’은 배제하지만, 구체적 해결과정에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한·미·일·중·EU 등이 적정부담을 공유할 경우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허용함.
- 그러나 북핵 문제 등 WMD 해결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주한미군문제

- 한국의 명백한 입장은 남북간 군사적 대립이 현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연합전력이 대북 억지력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은 점차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담당하는 역할로 확대될 것임

○ 주한미군, 특히 제2사단의 재배치문제는 한·미 연합전력의 억지력을 유지·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지만, 기존의 배치를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적 과급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정상회담의 합의대로 한반도의 긴장완화 수준을 고려하면서 추진하도록 함.

- 특히 주한미군이 ‘인계철선’ 문제에 대해 과민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한반도 방위와 동북아 지역 안정에 대한 미군의 역할을 평가함.

○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재조정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수준 또는 정상화, 북·미관계의 진전 수준에 따라서 한·미동맹의 기본축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 수준, 미국의 동북아전략, 동북아 국제질서 등을 감안하여 논의될 것임.

3. 다자회담문제

○ 3자회담 재개 또는 3자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새로운 형태의 다자회담이 진행되더라도 회담 의제를 두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

- 북한은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지원을 확보하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 다자회담은 가급적 지연시키는 전술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대로 한국과 일본이 다자회담의 초기부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조화될 수 있는 의제의 창출이 필요할 것임.

-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체제 보장을 포함, 한반도문제가 포괄적·단계적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포괄적 의제를 제안, 그 속에서 북핵문제의 先 해결을 추진함.

○ 한국이 다자회담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남북 당국 간 대화에서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등 안보 사안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임.

- 대규모 경협문제는 한국측의 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한·미정책협력문제

○ 최고 정책결정자 수준에서부터 각급 정책실무선에 이르기까지 정책협력과 조정의 제도화를 위해 상시 협력채널 구축·운영함.

-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 창구를 체계화함.
- 정책연구기관과 민간 차원의 각종 정책연계망을 조성·운영함.

○ 미국의 정책결정과정 에 대한 식견과 협상 능력을 겸비한 관료,
전문가들을 충원하여 대미 협상 능력을 제고함.